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Global Issue Paper

GIP 17-002
2017. 2. 15

글로벌 이슈 페이퍼는 세계 126개 무역관에서 입수되는 실물 경제 정보를 취합·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투자 진흥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해외 각 국의 현지 동향과 업계 반응 등 현장감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음을 첨언드립니다.

이슈 요약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 ·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조사배경】 국경조정세, 미국의 재정 ·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

○ 미국 하원 공화당 주류가 제시한 세제개혁의 일환인 '**국경조정세**'**가 現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결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초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됨.

○ 아직까지 국경조정세를 포함한 세제개혁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절충을 통해 **급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논의배경】 현행 미국 과세제도가 수출경쟁력을 약화, 자본유출을 가속화한다고 주장**

○ 높은 법인세율과 **글로벌 과세 체계가 미국기업의 해외 이전과 자본유출의 원인**

– 또한, 교역상대국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

□ **【찬반논란】 국경조정세 도입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

○ **(찬성)**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무역적자 축소,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증대, 기업들의 해외이전 및 아웃소싱 등 근절**

○ **(반대)**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중산층 가계부담 증가, 달러인상으로 수출촉진/수입억제 효과 반감, WTO 규정위반 소지,** 산업별 득실차이로 시장왜곡 발생

□ **【우리 경제·산업 영향】 국제교역, 직접투자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 전망**

○ **(교역)** 수입품 가격 급증으로 **소비재 수출 타격,**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 시 우리 **소재 산업에 피해**

○ **(직접투자)**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상실로 글로벌 직접투자 감소**

□ **【시사점】 국경조정세 도입 불투명하나, 면밀한 영향 분석으로 사전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 진출까지 고려한 **對美사업 전략 재검토 필요**

○ 단순 상품 수출에서 탈피하여 **상품 및 서비스가 혼합된 프로젝트形 고부가가치 수출**을 지향해야 함

1 조사 배경

□ 국경조정세, 미국의 재정 ·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

○ 지난해 6월 **하원 공화당은 『세제개혁을 위한 청사진(Tax Reform Blueprint)』**을 발표하고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도입**을 제안

– 국경조정세 도입을 통해 **향후 10년 간 1조 달러의 세수 확대, 미국의 만성 무역 적자, 자국기업의 해외 이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

○ 한편, 매출과 제조공정에서 **수입산 비중이 높은 소매유통, 식음료, 자동차, 정유 관련 기업들은 국경조정세 도입에 적극 반대 입장**

– 실질적인 무역적자 해소 효과는 작은 반면 석유, 식품 등 소비재 가격 인상을 초래하여 **결국 일반 소비자와 중산층 가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

□ 트럼프의 통상 해법, 국경조정세를 통해 이행될 것인가?

○ 공화당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관세를 부과하는 직접적 '무역수단'보다는 국경조정세를 통한 간접적 '세제수단'을 선호**

– 트럼프가 공약했던 특정국(중국, 멕시코)에 대한 직접 관세부과는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하여 글로벌 통상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국내 세제법을 개혁하는 형식을 빌려 교역상대국의 반발을 잠재우되 실질적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묘안으로 국경조정세를 제시함.

○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해 아직까지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으나,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함.

□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여파 지대

○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국제 통상, 투자, 환율, 금융, 산업 등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는 현재 **미국 세제개혁의 최대 화두인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2 국경조정세 논의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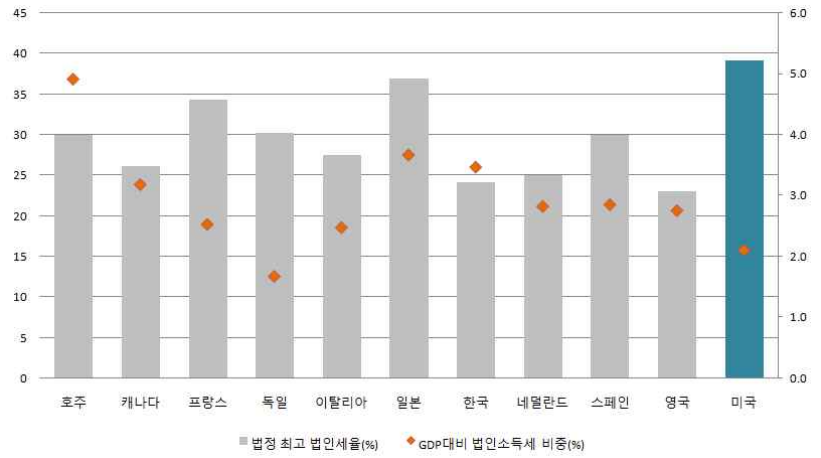
1 미국, 높은 법인소득세율로 기업과 일자리 해외 유출의 폐해 발생

○ **미국의 법정 최고 법인소득세율은 39.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효 세율 평균도 35.3%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OECD국가(미국 제외)의 평균 실효 법인세율은 24.2% 수준에 불과(2016년)

○ 미국의 경우 높은 법인세율에도 불구하고 **GDP 전체에서 법인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여 여타 선진국 중 최하위권** (그림 1 참조)

– 미국 기업들이 **자국의 높은 법인세를 피해 해외(低세율국)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미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지사로 이전하는 편법이 원인**으로 지목됨.

[그림1] 주요국 법인소득세율 vs. GDP에서 법인소득세 비중



자료원 : OECD, Tax Foundation 워싱턴무역관

2 글로벌(worldwide) 과세 체계, 미국 자본 유출 가속화

○ 현재 미국이 채용하고 있는 **글로벌(worldwide) 과세체계는 자국기업이 국내에서 거둔 수익뿐만 아니라 해외 수익에도 과세하는 제도**. 자국 내에서 거둔 수익에만 과세하는 영토주의(territorial)와 구분됨.

– 일본, 영국, 뉴질랜드가 2009년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하면서 현재 **OECD 국가 중 미국, 한국, 멕시코 등 7개국만이 글로벌 과세체계 유지**

○ 따라서, 미국기업은 해외 수익을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부과되는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2조 6천억 달러를 해외에 보유 중, 연평균 세수 손실 400억 달러 발생**

3 교역상대국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미국 수출경쟁력 약화

○ 미국을 제외한 15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의 수출 환급 제도는 사실상 '수출 보조금, 관세 부과'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1)]

○ 미국 법인세 제도가 준용하고 있는 생산지(origin) 기준 과세와 **외국의 도착지(destination) 기준 과세의 차이로 인해 세후 수출 가격에 왜곡** 발생

- 미국의 수입가격은 부가세 환급으로 인하되고, 외국의 부가세를 통해 미국의 수출가격은 인상되는 불평등(15~20%의 세후 효과)이 발생한다는 논리

생산지 vs. 도착지 기준 과세

▶ 생산지 기준과세는 제품이 생산된 장소를 기준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함.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하더라도 국내 판매와 동일하게 법인세가 적용됨.

▶ 도착지 기준과세는 오직 제품이 소비된 장소를 기준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될 경우 세금을 공제(부가가치세 국경환급제도 등)

○ 이러한 부가세 제도의 모순을 이용하여 **미국기업들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NAFTA 이후 멕시코가 부가세 인상(10%→16%)을 단행함에 따라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멕시코로 미국 제조업이 유출되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고 주장

4 '보호무역 정책 수단'으로 국경조정세의 활용 가치

○ 중국과 멕시코産 수입품에 45%와 35%의 직접 관세부과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 3% 인상 ▲850억 달러 수출 감소 등 자멸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2)]

○ 과거 친자유무역주의 성향을 보여 온 공화당 지도부는 **직접 관세의 대안으로 국경조정세 도입을 통해 세수확대와 무역적자 해소를 노림.**

- WTO 규정 위반 소지와 교역상대국의 보복 가능성에도 불구, 관세방식보다는 법인세법 개정 방식에 대한 반발이 작을 것으로 기대

1) 상무장관 윌버 로스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인 피터 나바로가 발간한 보고서(Scoring the Trump Economic Plan)
2) Moody's Analytics,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Mr. Trump's Economic Policies(2016.6월)

3 국경조정세 도입과 찬반논란

1 공화당 세제개혁안, 1986년 레이건 세제개혁 이래 가장 혁신적 제안

○ 작년 6월 공화당 하원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는 『세제개혁을 위한 지향(Better Way for Tax Reform)』이라는 강도 높은 개혁 청사진 제안

–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복잡한 세제에 따른 과세 불평등 ▲높은 법인소득세로 인한 국내 투자 감소 ▲국내 기업들의 해외이전 문제** 등을 제시

○ 해법으로 **▲개인소득세 제도 간편화 ▲법인세 인하 및 간소화 ▲자국 기업 해외소득 관련 과세제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016년 세제개혁안 주요내용

▶ 현재 10%~ 39.6%인 7단계의 개인소득세 구간을 통합하여 3단계 최대 33%로 간소화

▶ 법인소득세를 20%로 구간 단일화, 이자비용 소득공제 철폐, 투자지출 100% 즉시 공제

▶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전환, 도착지기준 과세제도 도입(국경조정세 적용)

2 국경조정세, 세제개혁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

○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국내 소비에는 과세**하되 **수출(해외소비)에는 과세하지 않는 도착지(destination) 기준 과세**제도 도입

– 즉, **자국기업의 수출은 법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입에 대한 비용 공제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 발생**

○ **국경조정세 도입을 통해** 결과적으로 **미국 상품의 세후 수입가격을 높이고, 수출가격은 낮추는 효과**

3 국경조정세 도입,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

찬성 논리

① 조세회피 목적으로 **미국기업이 행해 온 본사 해외이전이나 해외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아웃소싱 등이 근절**될 것

② '수출촉진, 수입억제' 효과로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증대**되어 결국 **미국의 대외무역적자가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

③ 수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확대 전망**[3)]

반대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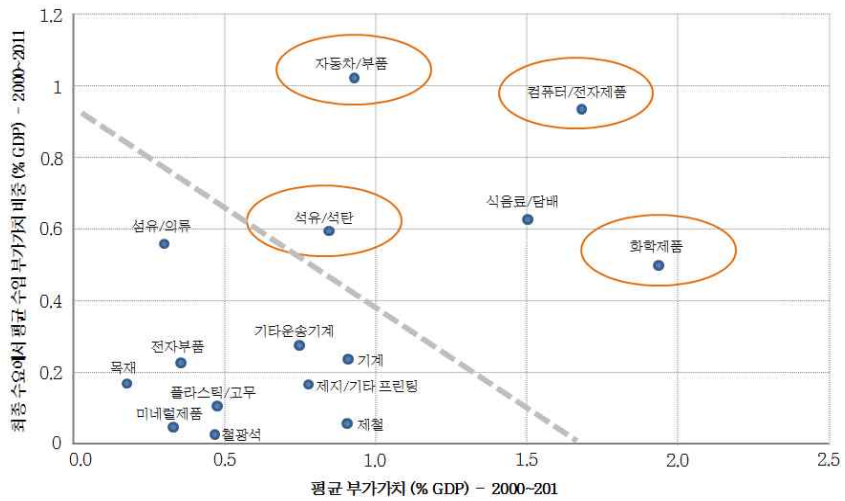
① 수입가격 인상에 따라 석유 등 **생필품 가격이 인상되어 저소득·중산층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

②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의 인상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수출촉진·수입억제 효과는 상쇄됨.**

③ 국경조정세는 **WTO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상대국의 보복 대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④ 제조공정에서 **수입부품 비중이 높은 자동차, 컴퓨터·전자, 석유·화학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그림2 참고)

[그림2] 사업별 수입 부가가치 비중 대비 부가가치 창출



자료원 : BEA, OECD,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

3) Tax Foundation, Details and Analysis of the 2016 House Republican Tax Reform Plan(2016.7월)

4 국경조정세 도입과 관련한 환율조정 효과 논란

○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미국의 수출이 확대되고 수입이 축소될 경우 **달러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4)]

– 따라서 **환율조정이 국경조정세의 보호무역 효과를 반감하고, 소비자 물가 인상 효과도 상쇄**하여 **글로벌 교역질서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

○ 한편, **환율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세수 감소, 소비자물가 상승, 수입업계 타격, 교역상대국 보복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5)]

– **환율은 무역거래 보다 금융·정치 요인이 반영된 국제환율시장 등락에 의존**하는 바, **수출입 거래에 따른 조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 국제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는 하루 4조 달러 규모로 무역거래액의 300배 이상

5 도입전망 : 의회와 트럼프 정부의 절충으로 통과가능성 고조

○ **(의회)** 하원의장 폴 라이언(Paul Ryan)과 하원 세입위원장 케빈 브래디(Kevin Brady)는 **금년 내 국경조정세가 포함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

– 상·하원과 행정부까지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이 세제개혁안을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강력한 입법 추진 예고**

○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국경조정세 보다는 단순한 국경세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국경조정세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

– 피터 나바로(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과 게리 콘(국가경제위원회 디렉터) 등 **핵심 백악관 경제 참모들 역시 국경조정세 도입을 고려중**이라고 밝힘.

국경세(border tax) vs.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 **(국경세)** 미국기업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여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아웃소싱)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직접 관세부과라는 차원에서 '무역정책'에 해당함.

▶ **(국경조정세)** 포괄적인 법인세 개혁에 포함된 국경조정세는 '세금정책'으로서, 미국기업의 수입(부)품 사용에 대한 비용공제는 불인정하고, 수출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 징벌적 성격이 강한 국경세와는 차별됨.

4) Alan J. Auerbach, Douglas Holtz-Eakin, The Role of Border Adjustments in International Taxation
5)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The Ryan Brady Cash Flow Tax: Disguised Protection, Exaggerated Revenue, and Increased Inequality

참고 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른 세후수익 변동 (예시)

〈 국경조정세 도입 전제 〉

- ▶ 법인소득세 인하 : 현행 35% → 20%
- ▶ 미국기업의 수출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수입에 대한 비용공제 불인정
- ▶ 실제 제품이 소비되는 곳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도착지기준 과세 적용

□ [수입기업] 수입부품 비용 공제 불인정으로 세후 수익 감소. 단, 달러 가치 인상 고려 시 수입억제 효과 반감

[표1] 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른 세후수익 변동 (수입의 경우)

	현행세제	국경조정세 도입	달러가치 인상
판매	$10,000	$10,000	$10,000
수입 부품	- 5,000	- 5,000	- 4,000**
판매비·관리비	- 2,000	- 2,000	- 2,000
세전 수익	$3,000	$3,000	$4,000
과세 총액	$3,000	$8,000*	$8,000
법인소득세	(x35%) $1,050	(x20%) $1,600	(x20%) $1,600
세후 수익	**$1,950**	**$1,400**	**$2,400**

* 수입부품비용($5,000)에 대한 공제 불인정으로 과세총액에 추가됨.
** 달러 가치 인상이 수입부품 가격을 20% 하락시킬 것으로 가정

□ [수출기업] 수출판매 과세대상 제외로 세후 수익 증가. 단, 달러 가치 인상 고려 시 수출 촉진 효과 반감

[표2] 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른 세후수익 변동 (수출의 경우)

	현행세제	국경조정세 도입	달러가치 인상
수출판매	$10,000	$10,000	$8,000**
부품비용	- 5,000	- 5,000	- 5,000
판매비·관리비	- 2,000	- 2,000	- 2,000
세전 수익	$3,000	$3,000	$1,000
법인소득세	(x35%) $1,050	0*	0
세후 수익	**$1,950**	**$3,000**	**$1,000**

* 수출판매($10,000)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달러가치 인상으로 수출판매 가격이 20% 하락하는 것을 가정

4 WTO 규정 논란과 제소가능성

1 다수의 연구기관들은 국경조정세의 WTO 규정 위반 가능성 제기

○ WTO는 **판매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indirect tax)에는 국경 조정(adjustment)을 허용**하나, **기업이익에 대한 직접세(direct tax)에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6]

– 즉, 제품에 부과하는 판매세의 일종인 **부가세의 수출환급제도*는 WTO에서 인정**함. 하지만, **국경조정세의 경우 기업의 이윤에 대한 법인세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직접세에 해당하여 WTO 규정에 위배**됨.

* 단, 여전히 국경조정세 찬성론자들은 해외국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수출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국경조정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WTO는 한 국가가 수입품에 과세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동종의 제품과 동일한 세율(또는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국경조정세에서는 국내 생산 제품에서 국내 인건비 등 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수입품에는 해외 인건비 등 비용 공제를 인정하지 않아 차별적 요소 발생** (국산품과 수입품의 동일 과세율 적용 위반)

2 WTO의 제소 판정 및 교역상대국의 보복적 조치로 인한 혼란

○ 교역상대국이 국경조정세의 부당성을 **WTO에 제소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최소 4년이 소요**되어 **국제 통상시스템과 기업들의 투자전략에 막대한 혼란** 초래

– 안보·경제적 이유로 개별국가 단위에서는 제소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 사례와 같이 여러 국가들이 집단으로 제소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WTO가 미국에 패소판정을 내릴 경우, 총 11개 국가(EU포함)에 2,200억 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분석[7]

○ **WTO 패소판정에도 미국이 불복할 경우, 여타 국가들도 유사한 국경조정세를 도입하거나, 자국 법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가 예상**됨.

6)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SCM Agreement")
7)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Border Tax Adjustment and Corporate Tax Reforms(https://piie.com/system/files/documents/bown20170201ppt.pdf)

5 우리 경제 ·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미국산업 여파] 사업구조에 따라 피해 · 수혜 업종이 극명히 드러나…

○ 국경조정세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은 △수입비중이 높은 대형 소매기업, △제조공정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참여도가 높은 기업 △해외 아웃소싱 비중이 높은 기업**이 될 전망

–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Barclays)는 국경조정세 도입의 경우 **피해업종으로 소매, 식음료, 소비재, 자동차, 통신장비, 석유화학**을 들었고, **국내 생산비중이 높은 분야인 항공방산, 소프트웨어, 소재 등이 수혜업종**이 될 것으로 분석

○ 국경조정세를 지지하는 기업들과 반대하는 기업들은 **각각 단체를 구성하여 치열하게 법안 지지·반대 운동을 진행 중**

[그림3] 국경조정세 찬 · 반 단체 및 주요 참여기업

찬성	American Made Coalition	반대	Americans for Affordable Products

자료원 : mericans for Affordable Products, American Made Coalition, A 홈페이지

2 [對美수출] 미국 수입시장 축소와 글로벌 밸류체인 혼란 불가피

○ **(소비재)** 국경조정세 도입으로 **미국의 대형 소매기업(월마트, 타깃 등)과 백화점 등을 통해 공급되는 수입산 소비재 시장이 급격히 축소할 전망**

– 수입 판매되는 의류, 식음료, 가전, 자동차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소비재 가격이 2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수년 동안 **미국 내수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휴대폰 및 가전, 생활용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던 우리 수출에 타격** 전망
  * 對美 소비재 수출증가율(%) : 5.4('10) → 18.6('11) →7.8('12) → 10.8('13) → 12.9('14) → 11.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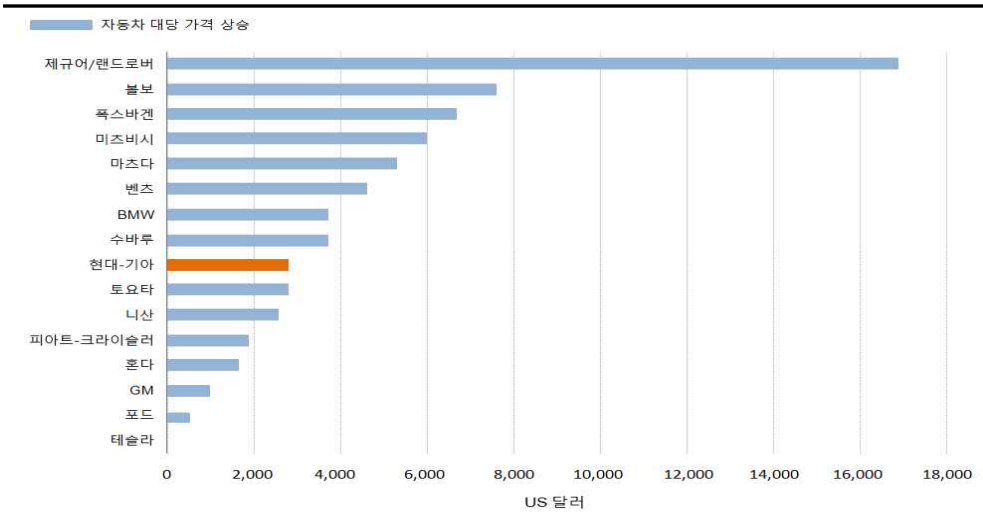
○ **(중간재)** 국경조정세 도입의 영향으로 **중국의 對美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는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은 연간 460억 달러 이상(전체 상품수출의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
- 한국은행은 **중국의 對美 수출이 10%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도 0.36% 동반 감소한다고 보고**[8]한 바 있음.
  * 전자·반도체, 석유화학은 각각 우리나라 수출 감소분의 34%와 10%를 차지하고, 산업별 수출 감소율 역시 -0.7%와 -0.5%로 가장 큰 것으로 추정

○ **(자동차)** 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평균 가격이 약 8% (2,500 달러 상당) 인상**되어 **연간 2백만 대의 판매 감소가 전망**됨.

-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GM, 포드와 같은 미국 브랜드의 경우에 가격 인상압력이 상대적으로 작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그림4 참고)
- 멕시코 등으로 공장이전을 계획하던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국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부품공급 채널을 미국산으로 돌리며 세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 부품업계에 피해가 예상됨.**

[그림4] 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른 브랜드별 자동차 가격 인상 전망



자료원 : Baum & Associates LLC

8) 한국은행,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2016.11)

3 [직접투자]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이전, 아웃소싱 인센티브 감소

○ **(법인세 개혁 효과)** 추진 중인 세제개혁안에 따라 미국의 법인세가 20%로 인하될 경우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상실**

- 다국적 기업들이 행해온 **본사 해외 이전(corporate inversion)하거나, 국내 수익의 해외지사 이전(transfer pricing) 등의 편법 행위가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
-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미국기업은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여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아웃소싱 전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 **(직접투자 감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개발도상국으로의 직접투자 유입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 브라질, 한국, 중국, 멕시코로의 투자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인용)

- 따라서 **국경조정세로 인해 달러 가치가 인상 될 경우, 우리나라 대상 부동산 또는 M&A 투자는 증가할 수 있으나, 그린필드형 제조업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4 [금융] 미국의 해외자산 가치 하락, 국제금융시장 혼란 야기 가능성

○ 국경조정세 찬성론자인 알랜 워바크(Alan Auerbach) 교수는 수출증가/수입감소 효과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2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9]

- 골드만삭스는 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른 환율변동에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만약 통화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대미 무역흑자가 높은 한국, 중국 통화의 변동 폭이(달러 대비 평가절하) 가장 클 것**이라고 주장

○ 웰스파고(Wells Fargo) 은행은 **미국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채권, 증권 등) 가치가 달러 가치 인상 폭에 비례하여(25%)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10]

- 따라서 미국 투자가들이 환율조정이 발생하기에 앞서 서둘러 **해외자산을 매각하고 달러 자산으로 갈아탈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이 예상**됨.

○ 해외국이 **미국 자산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는 방법은 자국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달러 대비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나,

-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불황으로 금리인상의 여력이 없어 만약에 있을 미국 투자가들의 자산 유출에 대처가 여의치 않은 상황**

9) The Role of Border Adjustments in International Taxation, Alan J. Auerbach,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0) 관련기사링크(http://www.fa-mag.com/news/bourse-investors-join-avocado-lovers-in-potential-border-tax-hit-31188.html)

6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국경조정세, 현재까지 구체적 계획과 도입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

○ 역사상 어느 나라도 실험해 보지 못했던, 하지만 막대한 국제 경제 파급력을 지닌 **국경조정세가 트럼프 정부 초반 최대 정치·경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공화당의 숙원인 '법인세 인하와 세제 간소화'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 기조와 만나**면서 **국경조정세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지**를 얻음.

- 한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등 **월가 투자기업들은 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을 아직까지 20% 정도로 전망** 중

2 국제 교역, 산업,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급격한 지형변화 예고

○ 국경조정세는 사실 미국의 국내 세금제도 개정에 불과할 수 있으나, **국제 교역, 외환·금융시장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결코 간과할 수 없음.**

○ 통상 전문가들은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WTO 규정 위반 소지 ▲교역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 ▲환율조정에 따른 무역·금융 시장 혼란**을 경고함.

- **산업 간 득실의 차이로 시장 왜곡이 발생**하여 경제가 침체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 가계소득이 줄면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

○ 따라서 공화당 주류는 국경조정세 도입에 따른 **경제여파, 산업별 영향, 금융 등 서비스 분야 적용 범위 등을 분석하여 최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노력** 중

3 우리 정부 및 업계, 면밀한 영향분석을 통한 사전 대응방안 모색 필요

○ 아직까지 국경조정세가 우리경제에 불러올 파장을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정부와 업계는 사전 검토를 통해 만일에 있을 후폭풍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가전, 자동차, 전자·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개별 수출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투자, 환율, 금융 리스크를 고려한 종합적 점검 필요**

○ 정부는 국경조정세가 국제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OECD, G7, WTO 등과 다자간 공조를 통한 대응책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할 것임.

4 우리 기업,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속에도 새로운 기회 발굴 노력 필요

○ **국경조정세 도입의 경우 글로벌 밸류체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 새로운 국제통상 변화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투자 진출까지 고려한 對美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임.**

- 특히 우리기업들은 **혁신적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생명과학 분야에서 미국기업과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서플라이체널 협력을 증진하여 우리 산업의 고도화와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국경조정세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전망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달러 가치가 인상될 경우 우리 서비스 수출기업에게 유리할 가능성**

- 국경조정세가 상품 교역 적용에는 용이한 반면 **기술용역, 소프트웨어, 금융, 상표권 등 서비스 교역에 적용은 어렵고 적용기준도 모호함.**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단순 상품 수출에서 탈피하여 상품, 용역, 디자인, 기술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形 고부가가치 수출을 지향**해야 할 것임.

[끝]

작 성 자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차장
- 시장조사팀 강환국 과장

Global Issue Paper 17-002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동향과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7년 2월 15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시장조사팀 (TEL 02-3460-7591) (FAX 02-3460-7914)
I S B N | 979-11-6097-117-0(95320)

Copyright © 201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